

# 東北亞經濟圈과 豆滿江流域開發

~黃金三角地域을 中心으로~

李 鶴 圭

〈產業研究院 中國班長〉

## 1. 머리말

두만강 일대의 개발에 대한 논의는 지난 해 7월 중국 장춘에서 개최된 동북아경제권 구상과 관련한 국제세미나를 계기로 폭넓게 확산되었다. 즉 두만강을 국경으로 하는 북한, 중국, 소련을 비롯하여 한국, 일본, 봉골, 미국 등 주변 관련국이 참가한 동북아경제권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두만강 유역이 각광받는 이유는 이 지역이 북한, 중국, 소련 3국의 접경지역이자 중국의 동북지방을 태평양으로 직접 연결시킬 수 있는 利點이 있고, 또한 동북아의 중심지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두만강유역 개발과 이 일대에 자유무역지대 또는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문제는 동북아경제권 구상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로서는 두만강개발과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관하여 이해 당사국들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간의 이론적 검토와 타당성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북한, 중국, 소련 등은 내부적으로 두만강 주변지역에 경제특구 설치 등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송망의 확충 등 준비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두만강 일대의 개발은 우리의 동북아지역 진출확대와 남북한 경제교류 증진이라는 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두만강 유역 개발과 소위 '황금삼각지역'에 관한 논의의 배경이

되는 동북아경제권 구상과 관련 각국의 이해 관계를 검토하고 두만강유역 개발과 그 주변지역의 경제특구 설치 논의에 이어서 우리의 대응책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 2. 동북아경제권 구상의 배경

EC가 오는 1992년까지 완전통합을 목표로 경제 통합을 가속화하는가 하면 미국도 FTA 정책을 통하여 캐나다, 멕시코 등과 북미경제권을 형성하는 등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가 동북아지역 국가들에 게도 지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고조시켰다. 소위 동북아경제권이란 남북한과 일본 그리고 중국의 요령, 길림, 흑룡강성 등 동북 3성 및 소련의 극동 지역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은 아시아 총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시아 전체 인구의 약 19%인 2억9,0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생산요소의 부존 형태면에서 각국간의 비교우위가 뚜렷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 국제분업의 확대가능성은 매우 크며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쟁무적 또는 다변적 협력의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본과 기술면에서, 소련은 자원면에서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노동과 자원분야에서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만약 동북아경제권이 형성된다면 상호보완 관계에 의해 정태적 비교우위의 이익을 최대한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동북아 국가들간의 교역규모는 점차 확

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관한 각국의 반응은 자국의 이익에 기초하여 다소 다르게 나타나고 있지만 문화적 지역적 유사성을 배경으로 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변국들의 여건과 반응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북 한

북한은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어 오고 있다. 우선 대내적으로는 생필품 등 소비재의 부족, 경제구조의 불균형, 에너지·철강 등 기초산업의 미비 그리고 기술낙후 등 많은 곤란에 처해 있다. 대외적으로는 對서방 부채를 동결하고 있는 상태이며 더욱이 금년 1월부터는 소련과 동구권 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도 경화를 지불해야 하는 등 외환 고갈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특히 세계의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이 정치적 민주화는 물론이고 개혁 및 개방을 통하여 경제를 회생시키려는 대세속에서 고립된 위치를 고수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동북아경제권 논의에서 가장 좋은 지리적 利點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다.

아무튼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로라면 북한의 두 만강 하구지역은 중국, 소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동북아경제권의 핵으로 부각하여 향후 북한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 2) 중 국

1980년대 중반부터 중국은 전국을 3개의 경제권—화남경제권, 화중경제권 그리고 화북(동북)경제권—으로 형성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다. 동북아경제권과 관련하여 중국은 이미 1985년 9월에 요령, 길림, 흑룡강 등 동북 3성과 내몽고자치주를 포함하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동북경제구로 설정하고 국무원에 東北地區規劃辦公室을 설치하였다. 이 경제구는 중국 전체면적의 약 1/8에 해당하는 124만 km<sup>2</sup>의 면적과 전체 인구의 10%인 1억200백만명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아경제권의 형성에 보다 적극적인 이유는 중국 동북지역의 경제적 비중과 발전잠재력 그

리고 일본과 한국의 자본을 이용하여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외에도 소련과 북한의 국경지대인 두만강 하류를 이용하여 태평양으로 직접 연결하는 항로를 개척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소 련

소련 역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의 개발을 목표로 아시아 태평양경제권에 참여하는 정책을 이미 구체화해 왔다. 1986년 고르바초프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을 중시한다'고 언급하였으며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에도 참여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어서 그는 1988년 9월 그拉斯노야르스크 연설에서 일본 및 아시아 신흥공업국과의 경제협력 강화를 희망하는 등 극동지역의 개발에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희망해 왔다.

소련의 극동지역은 태평양에 접하고 있고 태평양 연안국들과 경제협력관계를 수립하는 데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은 광물, 석유, 천연가스, 삼림, 수산 등 천연자원이 매우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으나 인프라스트럭처의 미비와 잠재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부존자원의 개발 및 이용도 실제 수요에 비하여 크게 낮은 편이다. 소련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극동지역이 가지는 이점을 살려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과 일본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 4) 일 본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북미자유무역지대의 형성과 EC의 실질적인 단일경제권으로의 부상에 직면하여 일본은 어느 경제공동체에도 속해 있지 않은데서 오는 잠재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안정적인 지역기반을 필요로 해 왔다.

일본은 이미 1965년 고지마(小島清)와 구리모토(栗本)의 태평양자유무역지대(PAFTA)안을 제기한 이래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권 형성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왔다. 특히 최근 일본학자들은 동북아경제권을 '환일본해(한국쪽에서 보면 동해) 경제권'이라고 부르고 이에 대한 연구와 각종 학술회의를 열고 있다. 동북아경제권에 대한 일본

의 관심이 큰 이유는 수출시장의 확대와 중국, 북한 등의 싼 임금 그리고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의 풍부한 원료의 안정적인 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국내적으로도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어 왔던 北陸, 北海島 등 북부지역을 균형적으로 개발하여 도시지역으로의 집중을 막는다는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막강한 경제력을 이용하여 동북아지역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 3. 두만강유역개발과 경제특구

최근 동북아경제권에 대한 관심은 매우 확산되었으며 논의의 내용 역시 보다 구체화되면서 여러가지 현실적인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해에 이어서 금년 8월 29~31일 기간 중 중국 長春에서 동북아 지역의 경제발전에 관한 세미나를 통하여 각국의 입장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된 논의는 두만강유역개발 및 경제특구설치에 관한 것과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에 관한 것으로 압축된다. 두만강 하구의 개발에는 이 지역에서 태평양으로 직접 통하는 항구가 없는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었다. 즉 중국의 防川에서 동해까지 두만강 하류 15km를 개발하자는 안을 처음으로 제기한 측도 중국이었으며 두만강 하구를 중심으로 한 '황금삼각지역'이라는 단어를 만든 측도 중국이었다.

중국이 두만강 유역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이유는 중국의 동북지역을 태평양으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항만을 건설하는데 있다. 중국이 두만강을 통한 해상수송로를 이용할 경우 방천에서 청진까지 40km, 부산까지는 750km, 소련의 블라디보스톡과 일본의 니가다까지는 각각 800km의 거리다. 뿐만 아니라 북미지역과 유럽으로 연결하는 해상운송의 경우도 大連이나 連雲港보다도 900~1,000km 단축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지난 해 5월 방천의 항만 건설을 염두에 두고 지질조사를 하였다. 그 결과 두만강 하구의 침적토를 100만~300만m<sup>3</sup> 정도 준설하면 깊이 3m, 폭 100m의 수로를 만들 수 있으며 이 수로를 통하여 2천톤급의 선박이 왕래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중국이 두만강 수로를 이용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북한과 소련이 이를 허용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강을 준설하는데는 북한과 소련 양국의 양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두만강은 유량이 많지 않으며 동절기에는 결빙된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중국은 제2단계 공사로 2015년까지 방천에서 혼춘까지 72km를 준설하여 1만톤 규모의 선박이 항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강을 더 깊게 준설하여 바닷물을 유입시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공사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될 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

두만강 개발이 관련 당사국은 물론이고 인접국들에게도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첫째, 북한, 소련, 중



국의 국경지대로서 3국이 공동의 권리를 가질 수 있고 둘째, 이들 3국이 경제특구, 개방구 또는 자유무역지구를 설치할 경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호 연계될 수 있으며 셋째, 해상수송을 통해 동북아 전지역은 물론이고 태평양으로 직접 연결된다는 점이다. 두만강 하구 일대에 항만이 건설될 경우 이 지역은 북한, 소련, 중국의 내륙 철도와 연결되어 동북아지역에서 각광받는 교역 중심지로 부각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두만강 하구의 개발은 관련 3국의 내륙으로 개발과 성장의 여파를 물고 가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황금삼각지대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황금삼각지대가 바로 두만강 하구 일대의 항만개발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황금삼각지대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는 북한의 합산도-소련의 보테루-중국 훈춘의 진신을 연결하는 800km의 지역을 일컬었으나 최근에는 북한의 先鋒(雄基)-중국의 防川-소련의 포시에트, 두만강시-방천-쁘르고야나 또는 先鋒-琿春-포시에트로 연결하거나 더 넓게는 함경북도-중국의 길림성-소련의 프리모르스크변구를 엮어서 말하기도 한다. 황금삼각지대를 어떤 범주로 연결하든지 두만강 하류를 개발할 경우 이를 중심으로 인접 3국의 주변지역이 경제특구나 자유무역지대로서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하고 대대적인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근거로 해서 나온 말이다.

북한, 중국, 소련 3국 모두 두만강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의사를 표명해 왔다. 중국의 훈춘을 1988년 12월 경제개발구로 확정하고 시가지 정비와 연길-도문-훈춘간 도로포장, 소련과의 국경무역 재개 등 가시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소련은 훈춘-글라스끼노간 국경선까지 각각 포장도로를 건설하였으며 곧 철도부설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련도 이미 1988년에 극동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자유무역지대나 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후 이 계획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나홋카, 포시에트, 블라디보스톡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동안 사실상 굳게 문호를 닫고 있던 북한도 최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발계획을 전하고 있

다. 지난 7월말 봉골의 올란바토르에서 열린 동북아 7개국 대표가 참석한 UNDP회의에서 북한측은 두만강 하류 합산도를 중심으로 한 반경 30~40km의 나진, 선봉, 새별을 연결하는 총면적 140km<sup>2</sup>(이 중 40km<sup>2</sup>는 호수지역임)를 경제특구로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그 타당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경제특구를 건설할 것이라는 미확인 보도가 최근 수년간 있어 왔지만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 4. 맷 음 말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장의 제공과 원자재의 안정적인 확보 등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이익과 통일환경의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외의존도가 높고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경제여건상으로 보면 민간차원의 기업진출과 정부간 협력 강화 차원에서 경제적 유대를 강화할 필요성은 높지만 이 지역의 경제블록화를 지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정한 경제블록에 가담하는 것은 블록의 국가 또는 지역과의 배타성을 초래함은 물론이고 국내경제의 왜곡과 종합적인 균형발전을 크게 저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쌍무적 협력과 민간차원의 진출을 촉진하고 지역주의와 경제동맹의 형태에 구애 받지 않는 개방적인 경제권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두만강 유역의 개발과 경제특구의 건설에는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관련국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이 요구되며 우리나라도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북한이 이념의 한계를 떠나 대국적인 면에서 사전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일 또한 중요하므로 각종 남북대화 채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

동북아경제권의 핵심으로 부상되고 있는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황금삼각주의 경제특구 건설이 실현될 경우 앞으로 우리의 기술과 자본이 진출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는 동북아지역 국가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발전뿐만 아니라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